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미와 활용 방안

전 봉 근 /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비확산핵안보센터장

2012 핵안보정상회의가 2012년 3월 26~27일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국내에서 열린 최대 규모 정상회의이며,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안보 정상회의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4월 5일 역사적인 프라하 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핵안보'를 제기하고,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였다. 탈냉전기 들어 국제사회는 과거 핵전쟁의 공포에 벗어났지만, 9.11 이후 새로이 핵테러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점이 핵안보를 강조하는 배경이다.

한국이 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 결정된 배경에는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기대가 있다. 한국은 개방국가이며 통상국가이므로, 핵안보를 통한 핵테러의 방지와 세계평화 유지에 큰 국익이 걸려있다. 연간 해외여행객이 1,200만 명을 넘고, 재외동포가 700만 명에 이르며, 경제적 대외의존도는 10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수출은 세계 8위 수준이다. 핵테러 방지는 또한 한국의 '세계적 책임'이다. 미국의 쇠퇴 이후 세계평화의 공공재를 제공하는데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참여와 기여가 필수적이다. 특히 개방통상국가로서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세계평화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동아시아에서 비확산과 원자력외교, 국제협력, 연구개발의 허브로 발전시킨다. 다음 한국의 비확산·핵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에 비확산원자력국을 설치하고, 비확산핵안보 연구센터를 설치한다. 나아가 국민적 핵비확산핵안보 의식 고양 등을 목적으로 '비확산기본법' 제정을 제안한다. 종종 국내에서 핵주권론, 핵무장론이 제기되어 한국의 비확산신뢰성을 훼손하고 실제로 한미원자력협력과 원전수출 등에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의 세계진출을 더욱 확대하고 국격과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비확산핵안보 제도를 정비하고 의식을 고양해야 한다.

“핵테러는 현시대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이다. 단 한 번의 핵테러 발생만으로도 대량살상과 엄청난 고통과 원치 않는 변화를 영원히 초래할 것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2007.6)

“핵테러는 국제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 중 하나이며, 강력한 핵안보 조치는 테러분자, 범뢰자, 기타 권한 없는 행위자의 핵물질 획득을 방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성명, 2010.4)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결정 배경

2012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가 2012년 3월 26~27일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국내에서 열린 최대 규모 정상회의이며, 참석 정상 수가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의 두 배를 넘는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세계평화와 국제안보 분야에서도 세계 최대 정상회의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위급 경제회의인 G20 정상회의 개최를 2010년에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이어, 불과 2년 만에 최고위급 세계평화 회의인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마치 세계 최대의 체육행사인 올림픽과 월드컵 축구대회를 번갈아 개최하는 것과 같은 영광을 한국이 누리게 되는 셈이다.

핵안보정상회의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로 시작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4월 5일 역사적인 프라하 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3대 축(핵군축, 핵비확산, 핵안보)의 하나로 ‘핵안보’를 제기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는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가운데 2009년 9월 안보리결의 18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오바마 대통령의 핵안보 구상을 지지하였다. 2009년 말 오바마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결정은 이런 비확산·

핵안보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지지를 보여준다.

마침내 오바마 대통령이 소집한 핵안보정상회의는 2010년 4월 12~13일 워싱턴에서 이명박 대통령 등 47개국 정상과 유엔(UN),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연합(EU) 등 3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는 주요국 정상들이 핵테러 위협의 심각성과 강력한 핵안보 대응체제의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합의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초보적인 발전단계에 머물렀고 취약한 핵안보 국제레짐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각종 핵안보 협정을 비준하여 조기에 발효시키고, IAEA의 핵안보 기능을 강화하며,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의 민간부분 사용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을 2차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발표하였다. 그런데 한국은 왜 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 결정되었으며,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는 무엇인가?

핵안보 분야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이해관계와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많다. 이런 나라를 제치고 한국이 선정된 것은 무엇보다 최근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기대를 반영한다.

한국이 비확산, 핵안보와 원자력 평화적 이용의 모범국가로 인정받은 것도 모든 참여국이 서울 회의를 지지한 배경이 되었다.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 하에서도 핵비확산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국내적으로 원자력에너지를 안전하게 잘 활용할 뿐 아니라, UAE와 요르단에 각각 원자력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를 수출하여 세계적인 원자력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중견국가로서 가교외교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 의제를 제안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교량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적이 있다. 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국과 비핵국, 원자력 발전국과 비발전국, 농축재처리 보유국과 비보유국 등 사이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한국의 역할이 기대된다.

한국이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장국이 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회의 전체를 주재하여 의제에 대한 정상들의 최종합의를 도출하고, 정상회의 종료 후에는 의장 자격으로 회의 결과를 언론에 발표한다. 정상회의 합의문이 될 '서울 코뮈니케(Seoul Communiqué)' 문안 작성 역시 의장국인 한국이 주도하며, 정상회의 개최 이전에 수차례 정부대표 교섭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여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문을 채택하게 된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워싱턴 정상회의 보다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제기구에는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가 추가로 참여하고, 참가국도 50개국을 넘어설 전망이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기대와 의의

무엇보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50여 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국제안보 회의이며, 국내 최대 규모 정상회의이다. 이를 통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경제 분야에서의 한국의 주도적 지위를 세계평화 분야에서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한반도 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만 몰두한 결과 세계평화를 위한 '세계적 책임'에는 매우 소홀하였다. 그런데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한국의 세계평화에 대한 기여를 상징한다. 또한 서울 정상회의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배출에 이어 우리 외교안보적 위상을 대폭 격상시키는 효과가 예상된다.

둘째,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안정화시키고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2012년 들어 김정일의 사망 이후 북한의 불안정성 증가, 김정은 체제의 군사적 도발과 핵위협 가능성, 주변국의 대대적인 권력교체로 인한 정세의 불안정성 확산 등이 크게 우려된다. 서울 정상회의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기회가 된다. 나아가 성공적인 서울 정상회의 개최는 한반도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 한국은 탈냉전기 국제안보 질서와 규범의 창출자로 거듭나게 된다. 종래 한국은 국제안보규범의 창출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배제당하고, 국제안보질서 하에서 일방적으로 규제를 받는 입장이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탈냉전기의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등장한 핵테러 대응규범을 창출하는 과정이다. 여기에 한국이 단순히 참가하는 수준을 넘어 주최국과 의장국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의제를 제안하고 문안을 직접 만든다. G20 정상회의에 이어 핵안보정상회의에도 한국이 가교외교 역량을 발휘하여, 서방진영과 비동맹진영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공동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넷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급락한 원자력 신뢰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한국의 모범적인 원자력발전과 핵안보 안전시스템을 홍보하여 한국 원자력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원전 수출의 기반을 확대한다.

다섯째, 정상회의는 핵테러를 방지하고 국제통상환경을 안정화시켜 우리 경제 통상이익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 한국은 세계 8대 수출국으로 국부와 복지를 창출하는 원천은 바로 무역에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적 대외의존도는 2011년 110%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외부 환경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핵테러 방지로 안정적인 교역환경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의 핵심적 국익에 해당된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주요 의제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핵안보체제 강화에 대한 정치적인 비전을 선언한 데 이어, 서울 회의는 실천적 비전과 이행조치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의 주도로 이 비전과 이행조치를 담은 ‘서울 코뮈니케’가 작성될 것이다. 서울 정상회의는 워싱턴 정상회의의 취지와 목표를 계승하면서도 추가적인 진전을 추진한다.

서울 정상회의는 우선 워싱턴 정상회의 합의와 국가공약의 이행을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워싱턴 회의에서 이미 제기된 고농축우라늄(HEU) 관리와 이용최소화,

정보보안, 방사성 물질 관리, 수송보안, 불법거래 방지, 핵감식, 핵안보문화, 조약 비준, 국제협력과 조정 등 의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핵안보는 주권 원칙에 따라 개별 국가가 궁극적으로 핵물질 관리 책임을 진다. 개별 국가의 핵물질 관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이 제한되어, 핵안보의 진전을 위해 개별 국가의 자발적인 핵안보 조치에 의존하게 된다. 워싱턴 정상회의에서는 개별 국가가 코뮌িকে 합의와 별개로 자발적인 핵안보 조치를 내어 놓았다.

예를 들면, 사용하지 않은 핵물질의 반환 및 핵시설의 폐기, 핵안보 교육훈련시설 개설, 핵안보협정 비준 등이 있다. 초청을 받았을 때 집주인에게 선물을 들고 가는 관례에 따라 이런 자발적 핵안보를 조치를 ‘하우스기프트(house gift)’라 부른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이런 자발적인 핵안보 선물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정상회의는 워싱턴 정상회의에 비해 의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워싱턴 정상회의는 테러집단이 핵폭발장치를 활용하는 ‘핵테러’ 방지에 집중하였지만, 실제 국제사회는 전반적으로 테러집단이 핵물질을 살포하는 ‘더티밤’ 가능성을 더욱 걱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최근 일부 아스팔트에서 미량의 방사능이 나와 그 아스팔트 전체를 제거한 적이 있다는 점은 방사능테러가 가져올 심리적 피해를 잘 보여준다.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의제를 확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방사능이 누출된 결과, 최소한 반경 20km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었다. 대도시에서 유사한 방사능 사고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방사능 테러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AEA 통계에 따르면 매년 200여 건의 방사성물질 도난과 분실이 발생하여, 더티밤의 발생 가능성을 경고한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테러집단의 공격으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방사능안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 결과, 서울 정상회의는 방사성안보, 핵안보와 원자력안전의 통합접근 등 2개 이슈를 추가적으로 채택하였다. 이렇게 의제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주최국인 한국이 크게 기여하였다,

다음 핵안보와 원자력안전의 통합적 접근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핵안보와 원자력안전의 기본철학과 접근방법의 상이성으로 인해 비상시에 대비한 통합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핵안보는 보안성과 비밀성의 원칙을 따르고, 원자력안전은 투명성과 개방의 원칙을 따른다. 따라서 만약 핵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관리자는 어떤 원칙을 우선시해야 할지 당황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사전에 핵안보와 원자력안전의 통합적 대응방안을 개발하자는 취지이다. 우리와 같이 원전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에게는 특별히 중요한 의제이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2011년 4월 19일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열린 ‘체르노빌 사고 25주년 원자력안전과 혁신적 이용을 위한 정상회의’에서 원자력안전과 핵안보의 연계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핵안전과 핵안보는 상호 분리된 이슈이지만, 한 부분을 강화하면 다른 부분도 강화된다. 테러분자가 핵물질과 핵기술을 구할 때, 강력한 원자력안전체제는 핵안보체제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원전시설이 더욱 안전하게 관리되는 만큼 세상을 위한 핵안보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참고로, ‘원자력안전’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자연재해와 같이 ‘비의도적’, 자연발생적, 기술적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핵안보’는 비국가행위자의 ‘의도적’인 절취·사보타지·불법거래 등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안보정상회의와 관련하여, 북한 대표의 참석과 북핵문제 논의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 정상회의 종료 후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 핵을 포기하는 확실한 의지를 보이고 NPT에 가입하여 합의 사항을 따르면 기꺼이 초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2011년 5월 다시 북한의 비핵화 합의를 전제로 김정일 위원장을 다시 초청하였다. 그런데 2011년 12월 말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

망으로 김정일의 서울 회의 참석 가능성은 사라졌다.

한편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의 형식적 정상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또는 김정은의 방남 가능성이 새로이 제기된다. 그런데 북한이 아직 핵무장을 고집하고 있어 정상회의 참가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한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집중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근래 남북 간 정치·군사적 대치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북측 고위 인사의 서울 방문이 실현되기 어렵다.

우리의 더욱 큰 관심은 북핵문제의 논의 여부이다. 그런데 워싱턴 정상회의가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핵테러 방지에 집중하였듯이, 서울 회의도 국가가 불법적으로 핵개발에 나서는 '핵확산' 문제를 직접 의제로 채택되지 않을 것이다. 북핵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핵안보정상회의의 개최 취지와 다르기 때문이다.

핵문제에는 비핵국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비확산 문제, 핵국이 핵무기를 감축하는 핵군축 문제, 원자력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문제, 핵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핵안보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그리고 개별 핵문제를 다루기 위한 다양한 회의체가 존재한다. 북핵문제만 하더라도 6자회담, NPT, 유엔안보리, IAEA 등이 가동되고 있다. 반면에 핵테러에 대비한 '핵안보' 기구가 미발달되어, 대응체제가 취약한 실정이다. 이런 판단이 바로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된 배경이다.

또한 핵안보정상회의는 전원합의제로 운영되므로 핵안보 목적 달성을 위해 특정 국가를 지목하여 비난하는 상황을 피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참여국의 반대로 북핵문제의 의제상정 자체가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안보정상회의의 기회에 정상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다양하게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자체가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정세를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핵안보를 위한 한국의 국익과 '세계적 책임'

일반적으로 핵테러와 핵안보를 미국과 일부 서방국가, 또는 정세 불안정지역의 관심으로만 보는 시각이 많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핵위협에 시달리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의 국제안보 위협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입장도 있다.

과연 핵안보는 우리와 무관한 국제사회 또는 먼 나라의 관심사인가. 우리는 핵테러 안전지대에 살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해,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는 운명공동체이다. 지리적 거리의 원근을 막론하고 일국에서 발생한 핵테러, 방사능테러와 같은 국제안보 사건은 즉각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미친다. 한국의 경우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한국은 세계적인 개방국가이며 통상국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해외여행객이 1,200만 명을 넘고, 재외동포가 700만 명에 이른다. 경제규모는 세계 10대 중위권이지만, 수출은 세계 8위이다. 수출입에 대한 국내총생산의 경제적 대외의존도는 110%를 넘어 세계 20대 경제대국 중 1위이다. 따라서 세계 어디에서든지 핵테러와 국제안보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 국민과 경제가 직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핵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사활적' 경제·안보 국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통상국가이다. 자원빈국인 우리가 교역 할 수 없다면 경제성장과 주민복지도 없다. 따라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역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핵테러를 방지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하여 안정적인 교역환경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누가 핵테러를 방지하고 세계평화를 지켜야 하나. 여기에 세계 8위 수출대국인 한국의 '세계적 책임'이 따른다. 대기업이 사회 전체와 공생하고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 따르듯이, 한국도 세계평화와 국제안보를 위한 '세계적 책임(global responsibility)'을 져야한다.

한국의 세계평화와 경제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다. 최근 우리 정부가 세계적인 빈곤퇴치와 공동발전을 위해 해외개발지원을 크게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세계평화를 위한 기여도 크게 확대해야 할 때이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는 우리의 국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세계평화에 기여하여 '세계적 책임'을 다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준비와 활용방안

우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할 것인가. 우리는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 확대, 원전수출, 일본 후쿠시마 핵안전 사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이란 핵문제 대응과 경제제재 참여문제 등 다양한 핵과 원자력 현안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서울을 동아시아에서 비확산과 원자력외교, 국제협력, 연구개발의 허브로 발전시킨다. 한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비확산·핵안보 규범 준수의 세계적인 모범사례이므로 동아시아 비확산 허브로서 자격이 있다. 또한, 이런 노력은 우리나라가 '성숙한 세계국가'를 지향하여 국제규범의 창출에 기여하려는 국정목표와도 부합한다.

다음 한국의 비확산·핵안보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 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외교부의 비확산원자력 정책역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특히 외교부에 비확산원자력국을 설치한다.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이런 부서를 갖고 있으나 한국만이 없는 실정이다. 이 조직은 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핵안보, 국제테러 등의 관련 현안에 긴급대응하고, 비확산 국제규범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민간부분의 비확산핵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연구기관인 외교안보연구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하고, 국내외 비확산핵안보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나아가 국내외 비확산정책 수요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부처 간 비확산업무의 조정, 국민적 핵비확산 의식 고양 등을 목적으로 ‘비확산기본법’ 제정을 제안한다. 종종 국내에서 핵주권론, 핵무장론이 제기되어 한국의 비확산신뢰성을 훼손하고 실제로 한미원자력협력과 원전수출 등에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있다. 비확산기본법은 비확산의식 국민교육과 비확산 문화를 확산하는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울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기여를 보장하기 위해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한국형’ 핵안보 의제를 개발하여 이를 ‘서울 핵안보구상’으로 발전시킨다. 1차 정상회의가 오바마 대통령의 직접적인 주도로 가능하였지만, 2차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의 강력한 리더십과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의제 개발이 요구된다. 이미 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핵안보와 원자력안전의 통합대응방안, 핵안보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방안 등이 연구되고 있는바, 서울 정상회의 이후에도 이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여 한국이 국제 핵안보레짐의 발전의 기여한다. 統